



# 양계 안테나

김동진 본지 편집장

## 시 과잉보도에 따른 소비위축 심화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가 아쉽다

무차별적인 방송사들의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PAI) 보도가 지속되면서 국민들 사이에 양계 산물에 대한 공포감이 확산되면서 소비가 크게 위축되고 있다. 출하를 준비하고 있는 농가에서는 닭을 판매하는데 무척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농가출하가격을 보면 닭고기의 경우 kg당 900원에 거래되면서 생산비선인 1,200원에 훨씬 못미치는 가격에 판매하고 있으며, 계란의 경우에도 농장 출하가격이 특란 개당 70원정도에 거래되면서 생산비인 85원보다 낮은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 토종닭의 경우는 더욱 심각하여 kg 당 600원 선에 거래되는가 하면 아예 출하를 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직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H5N1)가 발병하지 않은 상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우리나라에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병한 것처럼 전국이 떠들썩 하다.

국내 방송매체들은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로 양계인들을 보호해야 한다. 지난 2004년 조류인플루엔자 발생당시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서 작성된 가상 시나리오가 유출되어 마치 현재의 일인양 과장보도 되는 사례는 물론, 지난 1918년 스페인에서 수천만명의 사망자를 낸 살인독감이 현재의 조류인플루엔자와 같은 것처럼 오보를 하는 행위는 인기에만 급급한 방송의 한 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당시 스페인에서 발생되었던 독감의 유전자형은 H1N1으로 현재의 H5N1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 과학전문지 사이언스지와 네이처지에 명시되어 있다. 모 일간지에서 이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잘못 해석한데서 발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언론에서는 양계농가의 어려움을 감지해 너무 과민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느냐는 보도도 나오고 있으나 양계인들은 아예 이러한 방송조차도 내보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따라서 75°C에서 3분만 가열하면 먹을 수 있다고 홍보하는 내용조차 내보내면 안된다.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양계산물은 생닭 유통을 하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시장상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시중에 유통될 수가 없으며,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닭은 알을 낳을 수 없고 거의 대부분 24시간내에 폐사하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절대로

시중에 유통될 수 없기 때문이다.

언론에서 '조류독감'이라는 단어도 조류인플루엔자로 바뀌어야 한다. 독감이라는 표현이 사람의 유행성 독감을 연상시켜 조류인플루엔자가 곧바로 사람에게 감염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농가에서는 고병원성조류인플루엔자가 아시아 지역은 물론 유럽, 아메리카지역에 상륙하였고 중동과 아프리카에도 확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늦추어서는 안될 것이다. 정부에서는 이미 지난달 14일 조류인플루엔자 예보를 발령하고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본회에서도 비상대책본부를 설치해 대처를 하고 있기때문에 농가에서는 조류인플루엔자가 의심되는 닭이 발견되면 즉시 협회나 방역당국에 신고하여 사전 대비를 해야할 것이다.

## 산란계 자조금 사업의 방향 자조금 사료에서의 거출 당위성

양계자조금은 지난 1992년 처음 본회주관으로 자체조성금과 정부보조금을 합해 총 129,946천원으로 시작되었다. 축산분야에서는 양계업계에서 선두주자로 나선 것이다. 그러나 이후 실질적인 소비홍보 및 가격안정 등을 위해 쓰여지기에는 너무나 적은 금액이었다.

타축종에서도 자조금 사업에 관심을 갖게 되면서 본회를 비롯한 축산단체에서 의무자조금을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모아지면서 국회에 법제화를 추진하였고 그 결과 자조금사업이 시작된 지 꼭 10년만인 2002년 5월 13일자로 '축산물의소비촉진등에관한법률'이 공포되면서 자조금사업 추진에 활기를 얻게 되었다.

현재 양돈, 한우 등 축산업계는 이미 자조금사업 거출을 통해 큰 성과를 거두면서 추진이 늦은 양계업계에 자극을 주고 있다. 늦게나마 육계는 지난 24일부터 5일간에 걸쳐 육계자조금 대의원 선거가 이루어지면서 2006년부터 기금거출 및 집행을 통해 육계산물 홍보, 소비자 교육, 육계의 자율적인 수급조절 등 육계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산란계의 경우 일부 사료업계의 반발에 부딪쳐 자조금 거출에 대한 문제가 풀려나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농림부는 자조금사업에 대한 입법예고를 통해 사료거출 대상을 사료와 병아리로 함께 표기를 해놓은 상태이다. 사료업계와 부화업계중 한 곳을 선정해 달라는 요구인 것이다. 부화업계에서는 이미 지난해 환우 등 여러 가지 불합리한 여건으로 인해 형평성이 어긋나 도저히 병아리에서는 거출 할 수 없어 다시 재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며, 사료업계에서도 타 축산업계의 동요, 사료유통구조의 다양성, 생산비 상승 등 다양한 이유를 들면서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미 지난 20일까지 9개 업체(전체 46%)가 사료에 대한 자조금 부과에 동의를 표했으며, 지난달 전국 채란인대회시 설문에서도 91.8%가 사료에서 거출

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다. 따라서 현재 다양한 문제점을 고려할 경우 배합사료 판매시 부과하는 방법이 최선이라는 것이 업계의 전반적인 여론이다. 만약 사료거출에 대한 의견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산란계 의무자조금은 장기간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사료업계와의 충분한 의견 교환을 통해 장단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형평성 있는 곳을 통해 무임승차 없이 자조금 사업이 시행되어 채란업의 발전이 이루어질수록 전 업계가 노력해 나가야 할 것이다.

## 동물보호법 강화 움직임

### 양계산업 보호를 위한 방안 모색되어야

지난 1991년 5월 동물보호법이 국내에 처음 제정되었다.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 양계장의 경우 2012년까지 케이지 사육을 전면 중지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육계의 경우도 수당 사육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사육토록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애완동물의 사육증가 등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를 강화하고 동물학대에 따른 처벌을 강화하는 등 동물보호법을 엄격하게 적용하기 위한 작업에 들어갔다. 정부에서는 애완동물을 사람과 같이 살아간다는 의미의 반려(伴侶)동물로 규정지어 동물복지에 보다 큰 힘을 기울인다는 계획이다. '반려동물'은 1983년 10월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인간과 동물의 관계에 관한 국제심포지움」에서 '애완동물' 대신 사용하기로 제안, 현재 미국·유럽·일본 등에서는 대부분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기로 한 내용중 주요내용을 보면 종합적인 동물보호시책 수립을 의무화하고, 반려동물등록제 시행근거를 신설하여 분실에 따른 유기동물 발생 감소를 유도하며, 반려동물 소유자의 관리의무를 강화하여 인수공통 전염병 예방에 주력하고, 합리적인 이유없이 고통을 주는 행위 등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동물에 대한 금지행위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것은 물론 동물 학대자 및 동물 판매업자·소유자 등의 의무 위반에 따른 처벌 강화와 관련하여 기존 벌칙을 현행 최고 20만원 이하 벌금에서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법령의 실효성에 중점을 두어 동물보호법을 대대적으로 개정기로 하고 각 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금지행위 중 도박·영리·오락 등을 위하여 동물에게 고통·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 이러한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닭싸움은 가급적 자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동물 운송도중 상해를 입히거나 질식사하는 등 보호가 미흡할 경우 규제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운송시 사료공급, 난폭운전 금지 및 상해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차량 사용 등의 규정을 요구하고 있어 양계분야에서는 병아리 운송차량, 노계 및 도계 운송차량이 해당될 수 있어 산업발전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예외규정을 두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 **양계**